

갈등모형을 이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초연구

A Study on the Solu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s Conflict based on Conflict Model

권일혁 · 최윤수 · 정승균 · 김재명

Kwon, Il Hyuk · Choi, Yun Soo · Jung, Seung Kyoong · Kim, Jae Myeong

대한지적공사 홍보팀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석사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박사과정

ihk1372@naver.com · choiys@uos.ac.kr · skjay@uos.ac.kr ·

kimjaemyeong@uos.ac.kr

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이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도상과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갈등영향은 청산이나 경계분쟁 위주의 지엽적 논의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론을 토대로 갈등현황 및 한계를 도출 및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평가, 조정기구의 도입, 전담추진기구 창설, 청산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사업소요비용의 국가전액 부담과 같은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갈등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 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대처하고자 한다.

1. 서론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 일제에 의해 창설된 이래, 도해지적이 가진 문제로 도상과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양산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지적제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업이 시행될 경우 소송비용 및 사법기관의 업무폭주는 자칫 재조사 사업의 시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갈등 접근모형(Framework) 적용을 통해 사전 인지가 가능한 사전적 단계의 갈등현황 및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후적 단계의 갈등현황을 도출하고, 그 한계와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갈등모형 연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발생 시점을 토대로 토마스(K. Thomas)가 제시한 구조모형과 과정모형을 인용하여 <그림1>과 같은 Framework를 설계했다. 구조모형에서의 갈등유발 요인은 능력과 기술, 의사소통 장애, 목표의 양립성으로 분류하였는데, 능력과 기술은 넬슨(Nelson)의 갈등구조모형에서, 의사소통장애 및 목표의 양립성은 마일즈(R. H. Miles)의 이론적 모형의 갈등유발 요인에서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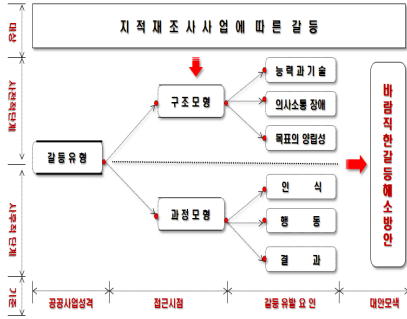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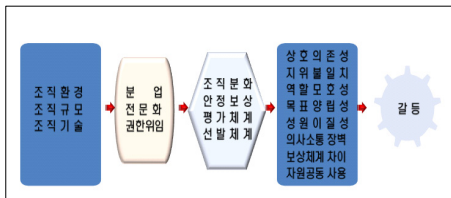


그림 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갈등 접근 모형



<그림 2> 마일즈(R. H. Miles)의 구조적 갈등모형

3. 갈등현황 및 갈등한계 파악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갈등요인을 분석의 틀에서 적용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6개의 갈등요인을 경계갈등, 소유권갈등, 청산갈등, 네트워크갈등 등에 대입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업에 따른 갈등의 한계는 경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경계갈등 해소비용, 참여경로를 토대로 파악하였다.

4. 바람직한 갈등해소 방향

바람직한 갈등해소 방향은 경계, 소유권, 청산, 네트워크로 나누어 갈등해소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계갈등 해소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사전조사측량을 수치측량과 사전측량을 병행하여 실시함이 타당하고, 기초자료조사의 방안과 사업의 사전단계인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형별 분류 방안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소유권갈등 해소는 공공사업으로

서의 지적재조사사업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갈등영향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 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기구가 도입되어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적자원 확보방안으로 거점대학지정을 통한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

셋째, 청산갈등 해소를 위해 청상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사업의 소요자원 조달방안과 소요비용의 부담은 국가가 부담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네트워크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주체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조정기구의 설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및 홍보방안, 그리고 주민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5.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첫째,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유형의 체계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갈등해소의 접근법의 사적수준, 지방, 지역수준, 초 국가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의 당위성이나 개별적 사안에 대한 규명 조치 이전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갈등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갈등모형에 입각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갈등해소 방향을 제시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선행적 연구이다. 이러한 선행적 연구를 토대로 갈등유형을 세분화하고 지표화하여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후속 연구방향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1] Getzels, J. W & J. M. Lopham & R.

F.,(1968), Campbel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a Social Process :
Theory, Research, Practice
Haper & Row

- [2] Miles, R, H., "Macro Organizational
Behavior, Santa Monica : Goodyear.
- [3] Pondy L, R, "Organizational Conflict :
Concepts and Models", in H. j.
Leavitt, L, R Pondy & D. M.
Boje(eds), Reading in Manageral
Psychology(4ed),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